與 원내대표 전해철·김태년·정성호 3파전

노웅래·박완주·윤관석 SNS에 불출마 의사 오늘 후보 등록 마무리 초선 68명 표심 잡기 관건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선이 김태년·정성호·전해철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후보 등록은 28일 마무리된다.

원내대표 도전자 중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전 후보 등록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가장 먼저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년 의원은 28일 오전 후보 등록과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친문(친문재인)이자 '이해찬계'인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유능한 원내대표' 비전을 강조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같은 이해찬계 윤호중 의원과 조율한 끝에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당의 공천을 책임졌던 사람이 총선 직후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10여분 후 내렸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실수로 올렸다"며 더 고심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후 다시 이 글을 그대로 올려 출마 포기를 공식화했다.

전해철 의원은 28일 기자회견과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애초 이날 기자회견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예결위 협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정을 다음날로 미뤘다. 전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서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의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정 의원과 김 의원,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완전히 굳힌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했던 다른 의원들은 뜻을 접었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4선 노웅래 의원은 경선 재도전을 검토했으나 정성호 의원이 출마하자 이번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3선 박완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일주일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4기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3선 윤관석 의원도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깜짝 출마' 의원이 등장하지 않는 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정성호·전해철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세 의원은 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전을 벌이며 21대 총선 당선인들의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68명에 이르는 초선 공략이 최대 과제다. 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일제히 등장해 '눈도장'을 찍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시민당 통합, 당원투표로 결정

원내대표 경선엔 시민당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5일까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당원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첫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는 시민당을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시민당과 5월 15일까지 합당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당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시행한 뒤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가 정한 합당수임기관 회의에서 15일까지 합당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합당 절차를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권리당원 토론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견 개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괄해 토론이라고 한다"며 "그냥 표결에 부치는 게 아니라 의견 개진 등 여러 과정을 총체적으로 거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등 원래 당으로 돌아갈 예정인 소수정당 출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흡수합당을 해 그분들이 우리 당 소속이 된 이후 출당 조치해야 비례대표 후순위 연계가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합당 전인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시민당 당선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간사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안 29일 처리

다음달 전국민 지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등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추경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기부 형태로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재난기본소득)은 매칭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통합당 윤재옥 의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법안 상정을 촉구하던 강 의원은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윤 의원 지적에 반박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하면 망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시하자 강 의원은 "사과할테니 법안 심사는 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는 추경안을 예산소위에 회부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다. 행안위는 28일 두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

"3개월내 받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자동 기부"

재난지원급 기부금 특별법 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 나흘만이다.

임채균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할 수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만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인 비대위' 진통

통합당 3선 11인 회동…"당선자 총회 뒤 전국위 열자"

4·15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이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어 당선인들의 의중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가 제시한 28일 오후 3시 전국위원회, 29일 오후 2시 당선자 총회 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당 3선 당선인 15명 중 11명은 오전 국회에서 '3선 모임'을 갖고 "지도체제 문제는 향후 당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선자 총회에서 개혁 방향과 내용에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박덕흠·이종배·유의동 의원이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당선자 총회를 먼저 개최한 뒤 전국위를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에 대해 (당선인 15명 중) 1명 정도가 반대했고, 나머지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선 당선인들이 요구하는 당선자 총회 날짜에 대해 "내일 오전으로라도 앞당겨 논의한 다음 전국위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전국위 연기'가 아닌 조기 총회를 요구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 문제가 아니고, 형식상,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자 총회를 앞당기는 데 난색을 보였다는 말에 "재선 당선 의원들도 28일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자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도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뤄져야만 당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연합뉴스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